

문서번호 평화 2014-1206

수 신 윤병세 외무장관 (전화: 02-2100-7001 팩스: 02-739-5370 이메일: minister@mofat.go.kr)

발 신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담당 : 김승환 간사 02-723-4250 peace@pspd.org)

제 목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공개질의서

날 짜 2014. 12. 18. (총 3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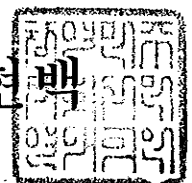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공개질의서

.....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비엔나 컨퍼런스(Vienna Conference on the Humanitarian Impact of Nuclear Weapons)'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5년 NPT검토회의에 앞서 핵감축과 비확산 체제를 공고히 하고, 핵무기 사용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번 비엔나회의에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지난 10월 69차 유엔총회에서 155개국이 공동으로 채택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병세 외무장관에게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3. 다음의 공개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문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정현백





■ 불입문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입장 관련 공개질의서

수신 윤병세 외무장관

발신 참여연대

지난 12월 8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는 전 세계 각국 대표단과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The Humanitarian Consequences of Nuclear Weapons)'을 주제로 국제회의(이하 비엔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이번 비엔나 회의는 이틀간 논의의 결과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영향 및 결과 8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어떤 핵무기라도 투하·사용될 경우 그 피해의 규모가 국가적 수준을 넘어 지역과 국제적 수준에 이를 것이며, 환경적 피해와 더불어 경제·기후·식량·인류 등 광범위한 영역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지난 오슬로 회의, 나야릿 회의에 이어 세 번이나 재확인된 사실입니다. 국제사회가 확인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2. 핵무기의 비인도성에서 대한 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어떤 핵무기라도 일단 사용될 경우 그 결과가 현재 인류가 예상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서는 엄청난 재앙적 피해에 대해 어떠한 국가나 국제기구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그 피해를 관련 국가의 정부 및 국제사회조차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난 2012년 67차 유엔총회에서는 35개국의 나라가 '핵무기가 미치는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2013년 10월 68차 유엔총회에서는 125개국, 올해 69차 유엔총회에서는 155개국이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등 핵무기의 비인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013년, 2014년 NPT준비위원회(Prepcom)에서도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이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위의 공동성명 중 어느 한 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해당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4. 한국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강제로 동원된 우리 민족 동포 7만 명이 원폭의 피해를

입었고 그 중 4만 명이 일제히 목숨을 잃은 역사적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로 인한 군사외교적 갈등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핵무기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국정부가 그동안 유엔총회와 NPT준비회의에서 발표된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원폭피해 국가인 일본의 경우 지난 68차 유엔총회에서부터 입장을 바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에 참여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처럼 기존의 입장을 바꿔 핵무기의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공동성명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5. 지난 10월 언론을 통해 리언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 2011년 10월 방한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다고 소개한 뒤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우리의 오랜 방위협정을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차치하고라도 한국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국의 핵폭격기가 동원되는 등 북한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이 수차례 드러난바 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북한의 핵폐기 요구와 함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책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6. 올해 4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인 마셜제도가 미국과 북한을 포함해 핵무기 보유 및 핵실험을 한 바 있는 9개 국가들을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의 핵군축 의무 이행 위반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였습니다. 마셜제도가 주장하는 9개 핵보유국의 핵군축 의무 위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평가는 무엇입니까?

끝.